

환경 정책

환경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신 원 우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필자약력〉

'71.3.2~'75.3.28 : 육사 토목공학
'88.3~'90.8 : 연세대 산업대학원 환경공학
'98.~'99. : 미국 조지아공대 연수
'84.12.~'94.4. : 건설부 상수도과, 하수도과 계장(토목기재)
'94.5.~'96.6. : 환경부 수도정책과(시설서기관)
'96.6.~'99.12. : 환경부 금강환경정기회명가국장, 미국환경
보호청 파견
'99.12.~'02.8. : 환경부 지구환경과장, 산업폐기물과장, 국토 환
경보전과장, 자연정책과장
'02.8.~'03.8. :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03.8.~ 현재 :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 도시화, 급속한 산업화 등 환경관리에 매우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1970년대 이후의 고도 압축성장과정에서 복합적인 환경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신기술 개발에 따른 새로운 환경위해물질에 의한 인체 및 생태계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환경문제 해결과정에서는 지역간,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많은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이 요구될 만큼 복잡

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국민적 욕구와 기대수준은 단순한 환경질의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환경질의 개선과 환경정책의 선진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아황산가스 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한강상수원의 BOD 수질이 개선되고 상하수도 보급률이 향상되었고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IMF 금융지원,이라는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아래에서도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참여,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할 환경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중점추진중인 주요 환경정책의 추진성과, 계획 및 향후 과제등과 함께 200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환경정책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1.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환경 조성

가. 푸른 하늘, 맑고 깨끗한 공기질 확보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자동차가 많고 GDP당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단위 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보전여건이 불리하다. 최근 대기오염도는 청정연료 및 저황유의 보급 확대에 따라 아황산가스 및 일산화탄소는 환경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오염도는 자동차 수의 증가 등에 따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 대기보전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파리, 런던 등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2~4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이산화질소 오염도도 2배 정도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연이 없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푸른 하늘 21·특별대책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기정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특히, 2003년에는 저공해 자동차 판매·구매 의무화,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 제정함으로써 수도권 대기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했고, 우리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04년에는 대기관리권역 범위, 특정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기개선 목표, 배출허용총량 할당 방안,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 등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분야 환경세 도입 등 수도권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전 공기질 측정 의무화, 공사장 소음기준 강화 등 실내 공기질 및 소음관리를 위한 시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대기환경 분야에서 200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로는 1월 1일부터 천연가스 사용 버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수준으로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건설기계 중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장비제작단계에서 기준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소음의 규제를 강화하여 산업단지 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지역에 포함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리강화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 및 신고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각종 신고기간을 조정하였다. 5월 30일부터는 신축되는 공동주택 내 각종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주민입주 전 측정하여 공고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오염물질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며, 오염물질을 다량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고시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대폭강화하게 된다.

나. 상수원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확보

「맑은물공급대책」(93~97) 등 과거의 수질개선 대책은 오염원의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그 성과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유역관리를 중심으로 한 「4대강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4대강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의 주요 특징 및 의의를 살펴보면, 먼저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맑은물 보전을 위해 보다

환경 정책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하고,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상류지역의 고통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지도록 함으로써 상·하류가 보완·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하류 공영(Win-Win)정신을 바탕으로 하였다. 둘째, 정부주도의 하향적 계획에서 탈피, 대책수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 환경·사회단체, 전문가, 자치단체, 중앙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였다. 셋째, 그동안 오염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증(對症)적으로 대처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인 기초자료와 수질 모델링에 의한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하였다. 넷째, 오염총량 증가 억제대책,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등 근본적 수질오염예방대책을 강구하였다. 다섯째, 관련법령의 제정, 소오예산확보, 추진체계 정비 등 대책의 추진방안까지 기획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각 지역의 여건과 수질·생태·수자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사전오염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의 완성이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대책」이 '98.11월 확정되었고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이 다음해 12월에, 「금강 및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이 '00년 10월에 각각 정부합동대책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4대강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4대강 특별법이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시작으로 나머지 3대강 특별법이 2002년 7월15일에 제정·시행되었다.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과 특별법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자치단체, 정부간의 대화와 협력으로 대립과 갈등한 극복한 성공사례로서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형성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앞으로는 완비된 법과 제도를 성실하게 시행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4대강대책의 기초가 된 수계환경기초조사와 수질예측모델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최신화하고, 수변구역 지정 등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추후 배출량허가제, 배출권거래제 등 추가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대책, 축산분뇨의 관리체계 개선, 소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도 장기적인 수질관리 차원에서 계속 검토·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며, 수질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의 경우에도 BOD 중심의 이화학적 지표 기준보다는 생태계까지 고려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한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1월1일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이 낙동강수계의 경우는 톤당 100원에서 110원으로,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경우는 120원에서 130원으로 조정되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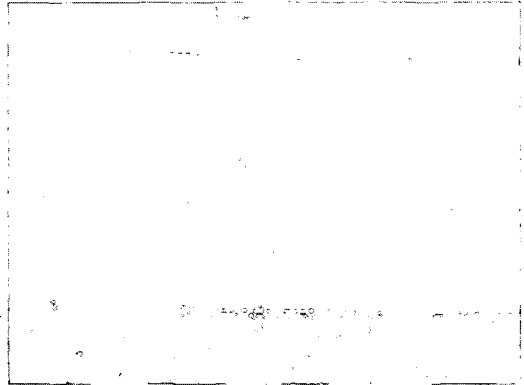
또한,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강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24시간 균등배출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1일 100톤 이상인 경우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토록 하고, 단독정화조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재질기준이 적용된다.

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관리시스템 확립

정부에서는 산업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수도시설의 지속적인 공급확충과 수질기준의 강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2년 12월말 현재 전체인구의 88.7%인 약 4,302만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 28,561천㎡에 이르고 있으며,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현재는 55개 항목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수도보급정책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특·광역시 상수도 보급율은 98.5%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농어촌 면지역의 상수도보급율은 31.1%에 불과하고 도서지역 등 급수취약지역의 경우 조그만 가뭄에도 상습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으며, 높은 인구밀도와 강우의 계절적 집중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1인당 물사용량은 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또한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등 지속적인 수질관리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국민욕구 증대와 더불어, 소독부산물, 병원성 미생물 검출 보도 등으로 인한 먹는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 지역 등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확충, 도서지역 등에 대한 수원지 개발, 해수담수화시설 도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그 동안의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 절수기 및 중수도 설치확대, 절수형



수도요금체계 도입, 노후수도관 교체 등 15개 정책과제를 내용으로 하여 2000년 3월 수립된 「물 절약 종합대책」의 추진성과의 중간평가를 통해 분야별 절수목표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006년까지 수돗물 생산량의 13.5%인 7억9천만톤을 절약할 계획이다. 또한,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돗물 수질관리를 과학화하여 병원성미생물 및 소독부산물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수돗꼭지 수질검사 및 인증제도 확대 등 소비자 중심의 먹는물 수질관리 체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 및 수도시설 종합평가제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4년 7월부터는 먹는물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부산물질에 대하여 선진국수준의 규제기준을 도입시행하고, 병원성미생물 관리강화를 위해 시설용량이 1일 10만톤 이상인 정수장을 대상으로 탁도기준을 0.3NTU로 강화하며 연속자동측정장치를 이용한 개별여과지의 탁도측정이 의무화 된다.

라. 폐기물 감량·자원화

현대 산업사회는 대량생산·대량소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그 필연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다양화와 난분해화로 인하여 오늘날의 폐기물 문제는 자연의 자정작용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정책은 60년대의 단순한

오물청소개념의 초보적 단계에서 출발하여 최근의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정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도입된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 제도, 쓰레기 종량제, 1회용품 및 과다포장재 규제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3년부터는 기존의 '폐기물예치금'을 폐지하는 대신 제품·포장재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발생 폐기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였다.

앞으로도 쓰레기 줄이기가 생활 속의 실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적 노력을 바탕으로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분리배출·재활용하며, 처리가 불

가피한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폐기물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순환형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노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04년부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 무부과 대상 품목에 필름류 플라스틱포장재와 형광등이 추가되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분리배출표시가 의무화 된다.

마.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화학물질이 계속 개발되고 그 사용량도 늘어나 환경에 잠재적인 유해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물질의 시장진입 및 유통, 환경배출 등의 전 단계에서 위해성 평가와 배출량 보고제도 등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한 각종 시책을 더욱 강화

국제환경동향

질소화합물을 전기분해로 제거하는 오염수 정화장치

미쯔비시 공업은 식품업계 등의 유기화합물을 포함한 공장배수의 처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인 질소화합물을 전기분해로 제거하는 새로운 방식의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미생물을 이용, 분해하는 종래의 처리 방식에 비해, 단기간에 적은 면적이면 충분하고, 저비용으로도 정화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 새로운 장치는 처리조 내에 양극과 음극의 전극에 전압을 걸어 양극측에 차아염소산(次亞鹽素酸), 양극측에는 암모니아를 각각 전기분해로 생성한다. 그리고 양물질에 화학반응을 일으켜, 최종적으로 유기배수 중의 질소화합물을 무해한 질소가

환경정책

해 나가는 한편, 화학물질 오염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는 유해성 심사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 화학물질의 독성 등 유해성뿐만 아니라 해당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을 고려한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02년부터 위해우려물질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02년에 위해우려물질선정, '03년에는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환경모니터링을 거쳐 '04년부터는 위해성평가를 실시, 위해성에 근거한 화학물질의 통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소각시설 환경영향조사 및 다이옥신 관리강화,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시 인근주민의 건강영향 평가 강화 등 국민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한반도 생태공동체 건설

가. 보전-개발을 통합한 선진적 국토환경 보전 체계 구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행위나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개발사업 등 국토의 난개발이 환경·교통·교육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토훼손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국토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토록 하는

국제환경동향

스 등으로 분해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미쯔비시 공업은 작년 12월부터 이 방식을 사용한 우수처리시스템 수주를 개시하였다. 장치의 본체 사양을 표준화한 유니트 구조로, 전기분해조에는 산소전기의 기술을 활용하였다. 1회에 약 0.35입방미터의 오염된 물을, 30분-1시간 단위로 정화하는 것을 반복한다. 단위 용량 환산의 정화 능력을 종래에 비해 약 20배로 향상시켰으며, 설치에 필요한 작업 기간도 1-3개월로 기존에 비해 절반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염수나 공장배수 등에 관계없이, 오염정화에는 생물 처리법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설비의 대형화가 불가피하며,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에 따른 미생물의 제어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전기분해 방식은 최소 단위의 표준 유니트를 복수 이용하여, 필요한 설비를 저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적인 제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조건이 변하여도 항상 일정한 처리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기존 생물처리설비와 병용함으로써 그 처리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공>

환경정책

「사전환경성검토제」를 법제화하였으며, 국토의 보전해야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을 구분하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전략적 환경평가로 통합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환경용량 산정모델 개발, 국토환경지표 개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과학적·체계적인 국토환경보전기법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전·개발을 통합한 선진적 국토환경 보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004년 7월 1일부터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를 지역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중점평가항목을 선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도입되며, 생태계보전 판단기준인 생태·자연도,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환경영향평가기

준으로 추가 설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내실화하게 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 공개가 의무화된다.

나. 자연생태계 보전·관리기반 확립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토를 이용·관리함에 있어 생태적 계획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입각한 공급위주의 국토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단기간에 국토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산림·녹지 및 갯벌감소, 자연생태계 단절 및 자연경관 파괴 등 자연환경 훼손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생물다양성이 급속하게 감소되어 생태계의 기능과 균형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환경동향

유럽연합,
용기 포장 폐기물
리사이클을 상향 조정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용기포장폐기물의 리사이클율의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현재의 목표치는 2008년 지점에서 25%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2008년까지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의 리사이클 상향 조정은 1994년에 실시되기 시작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EU지령」을 수정함에 따라 협의되어 온 것이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상향 조정에 합의함으로써 리사이클율의 목표치는 25-45%에서 55-80% 정도로 높아지게 된다.

이번 지령은 리사이클을 이외에도 회수율의 수

환경정책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각종 정책과 실태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월 동강댐 건설 백지화 및 동강유역 사유지 매입, 생태계우수지역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습지보전법' 제정, 국가 생물자원 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 등 법적기반 구축에 노력하였고,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백두대간-비무장지대-도서·연안 등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을 기본으로 국토의 통합 생태관리망을 구축하는 한반도 생태계 네트워크 구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백두대간보전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이상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된 곳은 복원해 나가는 한편,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으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지



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멸종위기 보호야생동·식물 대상 중 확대, 외래종·유전자변형 생물체에 의한 위해 방지대책 강화 등을 통해 국가생물자원 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에 노력하고 아울러 도심공원 조성 등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도시녹지공간 확대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국립공원의 관리·

국제환경동향

치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EU 지령안 수정을 위한 협의에서는 폐기 용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사용할 경우 이것을 회수로서 인정할 것인지가 논점이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종전대로 열 회수는 회수로서 인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소각에 의한 감량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자체들의 소각 처리는 이번 지령안에서는 회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회수율은 2008년 시점에서 60%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품목별의 리사이클율도 새롭게 설정되어 목표치가 높아진 품목도 있다. 개별적인 수치목표는 유리

가 60%, 종이 60%, 금속 50%, 플라스틱 22.5%, 목재가 15% 등이다.

이번 신 지령안은 2004년 초반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EU 가맹 국가들은 2005년 가을까지 국내법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공〉

이용체계를 자연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4년 7월부터는 밀렵·밀거래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도 처벌대상이 되며, 양서·파충류를 포획금지 대상으로 추가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서식지 보호 등을 위한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부상조수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시·군·구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비 지원제도가 신설되며, 특정도서 지정을 위하여 자연생태 기초조사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효율적인 특정도서 지정·관리, 지역주민 불편해소,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토지등의 매수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3. 환경-경제 상생의 환경산업(ET)강국 도약

종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환경파괴가 불가피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위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의 토대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며, 환경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자 원천이 되고 있다. 우리부는 2001년부터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에코-2 프로젝트」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환경기술개발 로드맵(TRM)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을 추진하여 '01년에 500억원, '02년에 700억원, '03년에는 75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4년에는 8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리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환경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그간의 추진실적 평가를 토

대로 실질적인 환경산업체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보완하여 2단계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 북경올림픽, 서부대개발 등 중국 환경시장 특수를 겨냥한 시장 선점 노력을 집중 전개하여 2001년 7월에는 중국 북경에 한국환경기술·산업전시관 설치, 한·중 환경산업센터 확대 개편 등을 추진하였고 동남아 국가 등에 대한 환경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한편 240억원의 환경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환경벤처기업의 창업과 투자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신기술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개발된 유망 환경신기술이 기업화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의 대학·연구소·기업 등의 연구역량을 결집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16개소를 설치하여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도모하면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산업별·오염원별 오염배출량과 환경오염방지비용 및 자연자원의 가치평가 등을 종합한 과학적 통계기반을 확립하고, 환경오염과 개선효과를 국민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 “녹색 GDP”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기업환경보고서 작성을 통한 기업의 환경경영성과 평가·공개제도,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 장려 등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2004년부터는 환경신기술의 현장보급 촉진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는 환경신기술 보유업체에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환경신기술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효과를 위해 환경신기술표지(ET마크) 제도를 도입하며, 환경신기술 유

효기간 연장, 환경신기술 취소제도 등을 도입하여 환경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4. 지구촌 환경협력의 다변화·내실화

지구환경보전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인류공동의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각 국가간의 합의는 국제규범으로 작용하여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환경관련 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조류를 적극 수용하여 환경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한 틀을 짜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를 정례화하여 환경사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산성비 측정·감시, 황해오염 저감 등 9개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편중되었던 환경협력 관계를 동남아 등 개도국에까지 확대하여 환경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등 21세기 들어 새로이 형성되는 국제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2002년에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를 계기로 국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바 있다.

2004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UNEP 특별집행이사, 회/지구환경장관포럼이 개최(3. 28~31, 제주)되어 120여 개국 환경장관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그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치름으로써 21세기 환경선진국을 향한 국가이미지를 고

양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의 국내적 대응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제고 및 대체에너지개발, 친환경적 연료전환 등 온실가스 저감대책 등을 망라한 법정부적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따른 환경서비스시장 개방요구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III. 맺음말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국토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국토의 단위면적당 감당해야 할 환경부하가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왕성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대도시의 대기오염과 주요 상수원의 수질오염, 국토의 난개발과 생태계 훼손 등 극복해야 할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기후변화협약의 발효가 가시화되는 등 국제적인 환경압력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일반국민 등 모든 행위주체들이 친환경적인 의식으로 무장되어 각종 제도와 규범으로부터 실제적인 행동과 실천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